원전 산업 정상궤도 안착… 신한울 3·4호기 제작 착수

올 3.5조 규모 일감 공급 추진
SMR 필두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4500명 육성 목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에 이어 2조원 규모 보조기기 발주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원전 일감이 공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5일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개최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과 이어진 '원전 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 출범 1년 원전 정책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이날 본격 착수한다. 또 탈원전 기간 일감절벽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원전 생태계에 신속히 일감을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 작년 2조4000억원 규모 일감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3조5000억원 규모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지빌리티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3월 29일 체결된 주기기 공급 계약에 따라 향후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의 일감이 공급되고, 이어 5월부터는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의 보조기기 계약(총 192건)도 순차적으로 발주된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연내 완전 정상화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건설에 과거보다 빠르게 자금을 집행키로 했다. 한수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 힘을 합쳐 1차년도 공정률을 높이고, 공정률에 따른 기성금도 최대한 빨리 집행해 원전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건강한 공급망 유지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매출 급감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지난해에만 정책자금, 협력업체 대출 등 약 4000억원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3월 산업부·산업은행·한수원·두산이 공동으로 20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프로그램도 추가 조성했다.

정부는 출범 후 1년간 탈원전으로 붕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정상화된 생태계 재도약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 '원전산업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원전 산업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미래 대비 관점에서 SMR(소형모듈원전)을 필두로 하는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한국형 원전(APR) 해외 수주를 위한 수출대상국 규제요건 충족기술 개발,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수요국 노형 맞춤형 원전 기기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연계 최적화 시스템, 열 직접 공급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원전 공기업, 민간은 향후 5년간 2조원을 원자력 연구개발에 투자해 국내 원전산업의 세계시장 선도와 중소·중견기업 기술역량 강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재도약을 이끌 우수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이에 2030년까지 원전산업 전문인력 4500명 육성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한다. 석·박사급 고급인력 1000명과 학사급 전문인력 1000명 양성을 위해 '차세대 원전 융합대학원', '원전 수출 특성화과정' 등 대학원 중심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설계 실습교육 프로그램' 등 이공계열 전공자 원전산업 유입 기반도 마련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 2500명 공급 지원하고, '원전산업 인재개발원' 및 '원자력 정책연구원' 등 원전 산업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한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원전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강소특구 성과서 포항·김해 가장 높은 평가 받아

포항 학·연 융합 오픈랩 7개 운영
기술 이전·투자연계 평균 크게 상회
김해 대형병원 납품 밸류체인 구축
의생명·의료기기 등 특화 분야 집중

강소 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한 지난해 성과 연차평가에서 경북 포항과 경남 김해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강소 연구개발특구 14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성과 연차평가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각 강소특구의 공공기술 이전, 투자유치, 기술창업 실적 등 정량적인 부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단·지자체의 특별한 노력 등 정성적인 부분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1기 강소특구는 지난해 사업 3년차로서 그간의 투자를 기반으로 본격적 성과 창출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다.

경북 포항 강소특구(첨단신소재)는 포항공대의 원천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실용화기술을 연계하는 학·연 융합 오픈랩을 7개 운영하고, 이를 다시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우수한 산·학·연 연계 기획창업 시스템을 갖춘 덕분에 공공기술 이전(73건), 특구기업 투자연계(477억원) 실적이 강소특구 평균(29건, 104억600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경남 김해 강소특구(의생명·의료기기)는 국내 대형 제약회사와 연계된 연구소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고, 대형병원에서의 특구기업 제품 임상시험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실증된 제품을 대형병원에 납품하는 밸류체인이 탄탄히 구축돼 있었다. 또 작년 연구소기업 창업(8개사) 실적이 전부 의생명·의료기기 분야에 해당하는 등 특화분야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있었다.

2기 강소특구는 사업 2년차로서 생태계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단계로서, 서울 홍릉, 충남 천안·아산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거뒀다.

서울 홍릉 강소특구(디지털헬스케어)는 특구기업을 위해 싱가포르, 독일, 중국, 프랑스 등 해외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1~2억원 규모부터 수십억원 규모까지의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또 전(前)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병원·제약사·규제·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컨설팅 플랫폼을 매월 운영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잘 갖췄다.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차세대자동차부품)는 모빌리티와 과학기술에 특화된 투자협의체를 신설하고, 특구기업의 싱가포르, 베트남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며, 특구기업과 대·중견기업 협력을 성사시키고 수출까지 연계하는 등 우수한 기술사업화 여건을 갖췄다.

3기 강소특구는 사업 1년차로서 지정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존 특구의 노하우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강원 춘천(바이오 의약 신소재)은 다양한 지원수단들을 모듈형으로 구비해 공백·중복없는 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 서구(환경오염 처리·관리)는 특구기업과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연계가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우수특구 포상, 우수사례 확산, 미흡부분 보완 등에 활용해 앞으로의 사업 성과를 제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국회 MWC' 개최… 여야 "ICT 산업 위한 제도적 지원"

국회과방委·과기정통부 공동 주최
삼성전자·SKT 등 대기업부터
중견·스타트업 정보통신社 참여

한국판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을 표방하는 '국회 MWC 2023'이 15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로 열리며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먼저 전시회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 및 장비들을 소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MWC2023 개회식'에 참석해 참여기업 부스의 개발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전시회에 참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최근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희망이기도 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생계, 직업,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ICT 산업들이 제재 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한국공항公, 日 UAM 상용화 파트너십 맺어

(도심항공교통)

2025 오사카 엑스포 앞두고
간사이 공항그룹과 방안 논의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일본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그룹과 2025 오사카 엑스포를 앞두고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윤형중 사장은 야마야 요시유키(Yamaya Yoshiyuki) 대표와 브노와 흘로(Benoit Rulleau) 공동대표 등 간사이 공항그룹 경영진과 2025 오사카 엑스포에 선보일 일본의 UAM 상용화 준비사항과 UAM이착륙장(버티포트), 제작사 등 교통관리 전반에 대해 상호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 증대 및 지역 간 항공노선 확대를 공표함에 따라, 기존 오사카 지역의 노선 증대 뿐만 아니라 양국 지방도시 간 신규 노선 개설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는 촘촘한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사이 공항그룹은 간사이국제공항, 이타미공항, 고베공항 등 3개 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일부터 3일간 고베에서 제18차 국제공항협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를 개최한다.

일본은 현재 국가 주도의 UAM 전담반을 구성해 엑스포 기간 중 UAM 운항을 위해 버티포트 운영자와 기체운항사를 선정하고, 기체 인증을 위한 美 연방항공국(FAA)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일본 간사이 공항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양국 지방공항 간 노선 증대는 물론 2025년 UAM 상용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